

OECD Insights
**Sustainable Development: Linking Economy,
Society, environment**

Summary in Korean

OECD 보고서

지속가능발전: 경제, 사회, 환경 연계

국어 개요

- 요즘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표현을 어디서나 접하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생산과 소비는 지속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의 세계화 현상은 지속가능성에 이로운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기존의 경제분석도구로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도록 정부, 기업,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OECD 보고서 시리즈의 하나인 동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고의 틀을 이루는 추이, 쟁점, 개념 등을 소개한다. 우리는 흔히 지속가능성 개념이 본질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생태계와 천연 자원을 보존하면서 보다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데 경제 발전을 활용함을 뜻한다.
-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인데 국가정부, 또는 우리가 시민으로써 해야 할 선택에는 늘 상충관계가 있어서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이러한 도전요인을 강조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알고 있었나요?

- 개도국의 인구 4명 중 1명은 절대 빈곤 상태다.
- 매년 10억개 휴대전화가 팔리며 평균 사용자는 18-24개월마다 전화를 교체한다.
- 햄버거 하나를 만드는 데 24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는 *브룬트란트 보고서*로도 알려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 등장한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널리 인정받기 시작했다. 경제발전 개념 및 관행 차원의 ‘변화를 위한 글로벌아젠다’를 제안하고자 창설된 UN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우리의 생활방식과 운영방식을 재고해 보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발전에는 2 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 먼저 경제성장만으로 범세계적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인식인데 어느 활동이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이 상호연관돼 있어서이다. 이 중 한 측면만을 고려하면 오관을 부르고 ‘지속불가능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예로 이윤마진에만 집중하면 결국 사회전체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역사가 증명해 주었다. 그렇긴 해도 환경을 지키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부분적으로나마 경제적 자원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이다.

그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은 상호연관된 성격인 만큼 전략을 조정하고 옳은 결정을 내리려면 지리상이나 제도상의 경계를 초월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정부기관이나 단일 지역처럼 미리 정해진 관할에 속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다.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경제, 환경의 ‘3 대 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 주거지, 경제체제가 서로 연관돼 있다는 기본 개념은 그대로 유효하다. 우리가 이러한 상호의존관계를 수년 아니 수십년 동안 모른 채할 순 있어도 머지않아 어떤 경보나 위기가 오면 다시 생각나게 된다고 역사가 증명해 보였다.

국가마다 역사, 경제, 사회 및 정치여건이 다르지만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원칙은 모든 국가에게 적용된다. 경제성장이 절대적인 요소지만 국민복리에 기여하는 모든 요인에 대한 이해 없이 경제성장만으로는 지속적인 빈곤 감소가 힘들다. 경제성장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각국의 교육수준 및 평균수명 확대와 으레 상호관계는 있으나 이러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속적인 추세인지 아닌지, 그리고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못 보는지 등은 말해 주지 않는다.

물질적 가치, 비물질적 가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오랫동안 경제성장과 경제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전세계 GDP는 1970년대 중반 약 16 조불에서 현재 40 조불 이상으로 늘었다. 기업들은 모든 제품의 대량생산을 활성화하고 줄곧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고 있다. OECD 국가에는 여전히 빈곤과 결핍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나 여타 생필품 외의 재화나 서비스에 소득의 일부분을 지출할 수 있는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과거에 회계나 예산, 측정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요소에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 예로 천연자원에 대한 가치 부여는 쉽지 않다. 삼림을 비롯한 일부 자원은 사고 팔 때 화폐가치를 가지므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지만 수목 가격을 안다고 해서 탄소 배출 상쇄 차원의 수목의 가치, 생물다양성 보존 차원의 수목의 역할, 삼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 얻는 정신적, 문화적 가치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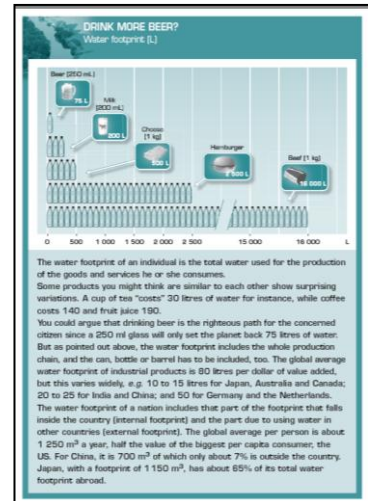
국제생산 추이와 소비 패턴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물품은 가격이 내려 가고 세계 곳곳에 계속 더 대량으로 운반되고 있다. 기술 응용은 지속가능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일부 없앨 순 있겠으나 다른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결국 소비 증가가 기술 발달을 앞서기 일쑤다. 예로 오늘날 자동차는 과거보다 연료 효율이 훨씬 높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그만큼 늘면서 공기 오염은 심해진 상태다.

지난 수십년 간의 경험을 보면 ‘그린’ 또는 ‘공정무역’의 틈새시장에 맞춘 지속가능제품을 제공한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 중요한 요인이긴 했어도 패턴을 대폭 변화시키진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게 되면서 석유 비용처럼 지속불가능한 소비로 인한 문제가 평균 소비자에게 더 구체적으로 와 닿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는 물건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품이 발생하는 폐기물 양, 제품의 생산이나 처분에 사용된 에너지, 물 및 여타 자원의 양, 제품 생산자들의 생활여건과 근로여건 등을 알고 싶어 한다.

제조업체는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더하여 미적 특성이나 사용 편의성으로 소비자를 끄는 제품들을 더 많이 구상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의 소비자 의식 변화와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확대 혁신은 고무적이다. ‘실패작’이나 ‘그린워싱’도 꽤 있다는 일부 비판자나 소비자 보호단체들의 지적은 맞긴 하다. 실로 환경친화적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의 원재료 목록을 살살이 살펴거나 전체 수명주기를 분석하고 나면 훨씬 덜 환경친화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많은 사람과 기업이 환경 문제를 인식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려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맥주 더 마시기? 물 발자국 (L)



지속가능성 측정: 언제 무엇을 측정해야 되는가?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하는 것은 첫눈에 불가능해 보인다. 대상이 꽤 광범위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그만큼 많아 기후 변화, 육아, 기업 윤리, 정부정책, 소비자 추이 등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 변수를 관련하는데 모든 변수를 어느 정도 측정할 필요가 있다. GNP, 생산성 등의 거시경제 지표, 물 소비, 배출량을 비롯한 환경지표, 평균수명, 학력수준 등의 사회통계 수치를

포함하여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이 중 지속가능발전 측정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무엇인가?

지속가능발전이 다차원적이고 동태적 개념이어서 문제가 더 난해해진다. 지속가능발전의 정량화는 시간 지평을 포함한 수많은 변수를 다뤄야 하는 곡예 작업인데 경제, 사회, 환경 현상은 서로 다른 속도로 상호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경제모형을 하나 가정해 보자. 대규모 에너지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적어도 5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거래 중이라면 가격 데이터가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는 속도인 나노초에 의해 커다란 수익이나 손실이 결정될 수 있다. 어족자원이 수년간 천천히 감소한 후 급속도로 사라진 환경 사례를 보면 변화 속도가 갑자기 가속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지속가능발전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연결시키는 과정이므로 미래의 선택과 결과에도 차례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러 방안을 개발하는 일이 단순히 통계적이거나 기술적인 작업이 아니며 모든 사회에서 크게 민감한 2개 영역인 정부 책임성과 사회참여를 관련하게 된다. 믿을 만한 정보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 차원의 향상을 측정하는 것이 민주적 과정의 핵심 요소인데 정부는 책임성을 높이게 되고 국민은 정책목표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지게 된다.

지속가능발전은 현세대의 복리와 미래 세대의 복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을 연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본 접근법’ 모형은 지속가능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틀로써 그 원리는 복리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부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를 보존 또는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한 사회의 총 자본 기반은 다음의 5개 형태로 구성된다:

- 주식, 채권, 당좌예금 등의 *금융 자본*;
- 기계, 건물, 통신 및 여타 인프라 등 *생산 자본*;
- 폐기물 흡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연자원, 토지, 생태계를 포함한 *자연 자본*;
- 교육받고 건강한 인력 형태를 갖춘 *인적 자본*;
-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도 형태를 갖춘 *사회적 자본*.

이러한 상이한 자본 유형이 복리 생산에 투입된 요소라고 간주한다면 일국의 부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합계하여 측정할 수 있다.

불확실성 거버넌스

연론계는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흔히 기업과 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가정부는 대규모의 다국적

기업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큰 성과를 보게 될 것인지는 정부가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노력을 조화시키는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범적인 생산·소비 관행을 장려하고 중복과 모순을 방지하도록 올바른 정책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직면한 큰 과제의 하나다. 생산자, 소비자에게 변화를 권유하는 것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며 폭넓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자체로도 충분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개개 생산자나 소비자는 사물을 변화시킬 능력이나 변화시키는 것에 흥미가 거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을 만들고 규제를 강요할 수 있는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다. 정부에게는 재량으로 득보다 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는 상품과 행동을 불법화하는 수단이 있는데 이는 오존층을 손상시키고 있던 냉장고와 에어로솔 스프레이에 사용된 가스인 CFCs 경우에 적용됐다.

‘그린세’, ‘환경세’ 등의 환경관련 세금과, 배출 거래도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생산자이든 소비자이든 오염 배출자가 스스로 오염비용을 감안하고 해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를 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실로 아일랜드의 2002년 ‘비닐세’는 비닐 사용을 90% 줄게 했다.

정부당국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정책 입안과 조정을 통해 주어진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도록 리더십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이해가 공동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시장실패’로 시장 기능만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도 정부는 개입한다. 지속가능성이 당면한 많은 과제가 범세계적인 성격인 만큼 국가들은 최상위층에서 협력을 구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실시해야 한다. 국가정부는 이 임무를 수행할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으며 또한 정책결정의 집행을 보장하는 수단도 갖추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묘사할 때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는 단지 목표를 확인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감독기구를 마련하는 문제라는 느낌을 주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다. 경제, 사회, 물적 자원의 모든 측면이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상이한 중요도를 갖는 여러 시간척도에 나타난 무한한 상호작용에 의해 그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다. 확고한 모형이라도, 꿩노는 예측이라도 우리가 알고픈 모든 것을 말해 줄 순 없는 현실이다. 지속가능성을 실행하려는 정부는 이 불확실성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목표뿐 아니라 전략과 목표 달성에 활용된 도구까지 지속가능해야 한다. 효과를 내도록 충분히 엄밀하면서도 변하는 상황과 우선순위에 대응할 수 있게 신축적이어야 한다. 불확실성에 맞서 거버넌스 자체가 지속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전 출판물은 사이트 www.oecd.org/insights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개요는 인쇄된 페이지에서 부터 Excel™ 파일을 제공하는 서비스 **StatLinks** 를 포함시킵니다!

© OECD 2008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